파견근로자 직고용 판결에 공공기관·기업 고심

톨게이트 수납원·섬 하청노동자 등 원청 근로자 지위 확인 잇단 승소
사기업·프리랜서 노동자 소송까지도 영향…업계 부담 커지며 난감

법원이 최근 하청·파견·도급 노동자가 제기한 지위 확인 소송에서 잇따라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 광주지역 공공기관과 산업계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위탁업체 노동자에 대해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고 보는 법원의 판단이 최근에는 사기업과 프리랜서 노동자로까지 확장되는 모양새다.

이에 노동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공공기관과 산업계에서는 직접고용 판결이 이어지면 후폭풍이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유상호)는 전직 톨게이트 수납원 A씨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도로공사는 A씨에게 채용 의사를 표시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섬 지역에서 일하는 한국전력 하청업체 노동자 145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 145명에 대해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고용의사 표시를 하라'고 판결했다.

법조계에서는 향후에 제기되는 소송에서도 이 같은 추세가 반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원청업체가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협력사나 위탁업체에 관리 책임을 떠넘기는 관례에 대해 최근 법원이 불법 하도급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원청이 직접 작업을 지시하는 등 하청 직원들에 대한 사실상 고용관계가 파악되면 원청의 고용의무를 인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공공기관의 위탁·파견·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가 인정되는 것도 예산의 집행과 작업 지시를 공공기관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법원의 추세는 사기업 하청관계와 프리랜서 노동자의 소송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포스코 소속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 59명은 길게는 11년 만에 승소했다. 이 판결에 따라 포스코는 2년 이상 일해 온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향후 포스코 노동자로 직접 고용하게 됐다.

지난 2일에는 여수국가산단 내 사내 협력업체 작업자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가 원청에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고, 프리랜서 AD(방송국 감독보조)가 제기한 KBC광주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지급 소송에서도 노동자계약 관계를 인정하고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황이 이렇자 광주지역 공공기관과 산업계는 후폭풍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공기관은 산하기관의 위탁업체가 많고 산업계에서는 협력업체가 많기 때문에 관련 소송이 계속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패소 가능성이 있고 공공기관과 원청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의 부담까지 안아야 한다는 점에서다.

광주지역 경영계 관계자는 "광주지역 산업계에는 원청보다는 협력업체가 많아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 원청에 부담을 안겨 추후 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부담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무사와 변호사에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공공기관도 난감한 모양새다. 당장 광주시도 시청 로비에서 농성중인 보육대체 노동자들과 관련해 다음달 3일 세종시에서 열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담당 송무팀을 보내 대응하기로 했다.

보육대체 노동자들은 이 자리에서 광주시의 직접고용 의무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광주지역 산업계에서도 "협력업체는 독립성을 갖추고 원청과 분리된 별도 공정을 운영하는데도 최근 판결이 이어지고 있어 유감"이라며 "직접고용 판결이 이어지면 관련 업계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신안서 외국인 노동자 양식장 수조 빠져 사망

신안의 새우 양식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양식장 수조에 빠져 숨졌다.

27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40분께 신안군 도초면에 있는 새우 양식장에서 30대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노동자 A씨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양식장에서 함께 일하던 한국인 업주 B씨는 "새우 먹이 주러 간 A씨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소방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접수 1시간 10여 분만인 오후 6시 50분께 3.5m 깊이의 새우 사육 수조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가 홀로 새우 먹이를 주다가 발을 헛디뎌 수조 안으로 빠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확인해 범죄 혐의점 여부를 파악 중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건설노조, 불법 하도급 혐의 건설사 고발…전수조사 촉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건설노조)가 경찰에 불법하도급 위반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광주지역 아파트건설 현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광주지역 불법 하도급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27일 오전 광주북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표방한 정부는 노조원에 대한 조사보다 불법하도급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현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200여명에 달하는 노조원을 조사했는데, 정작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 문제는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건설노조는 기자회견에서 건설현장에서 가장 만연한 불법 하도급은 석재공사라고 지적했다. 건물 외관 석재공사를 위해 발판을 만드는 시스템비계공사가 따로 진행돼야 하지만 시공면허가 없는 석재업체가 비계 시공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면허 없이 진행된 비계시공 때문에 추락사고까지 이어진다는 것이 건설노조의 주장이다.

건설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광주 북구 소재 한 아파트신축 현장 내 불법 하도급 정황이 있는 건설사를 고발했다. /김다인 기자 kdi@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7일 오전 광주북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제공〉

"광주 서구의원 2억 상당 금품수수 의혹" 고소

"철거업체로부터 받아"…수사

현직 광주시 서구의원이 지역 철거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 서구의회 A 의원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현재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증거물을 수집해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소장에는 A 의원이 지난 2021~2022년 광주의 한 건축물 철거 전문업체 대표 B씨로부터 2억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 B씨는 A 의원이 "민원 해결이나 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와 부산지역에 여행을 함께 가 골프용품 700만원, 백화점 명품 800만원 등 비용을 대신 냈으며, 900만원 상당의 명절 인삼 선물세트, 1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생일 선물, 국회의원·시의원 후원금 800만원 등 총 2억여원의 금품을 A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주장을 폈다.

또 A 의원으로부터 광주 서구청 앞 육교 철거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요구대로 기부금을 냈는데도 공사를 수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일보는 A 의원의 해명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감형 받으려 피해자에 또 사기 친 투자 사기범 항소심서 실형

재판에서 형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또다시 사기친 투자 사기범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혜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피해자에게 수산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단기 5~10%, 장기 10%의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41차례에 걸쳐 7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실제로는 수산업 관련 사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다수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아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운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1심 재판이 끝났음에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제출된 합의서조차 피해자를 속여 작성·제출한 것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은 없었다"면서 "A씨가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여론조사 허위 응답 권유' 영암군수 징역 10개월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승희 영암군수에게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2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태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우 군수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우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과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방선거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못지않게 결과와 절차가 공정해야 하지만 지난 영암군수 선거는 공정하지 못했다"며 "불공정한 선거를 주도한 피고인들에게 가담 정도를 구분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우 군수 등에 선고공판은 8월 10일 열린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6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22타경 75458	1	화순군 사평면 외남로 242-20 단층98.98㎡ 제시외주택등31㎡	단독주택	167,235,240 167,235,24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목록1,2,4],감정서상제시외건물ㄷ은인접필지422-1,421-4지상걸쳐소재
		화순군 사평면 원리 694 288㎡ 제시외창고등60㎡	대		
		동소 692 222㎡ 제시외가추22㎡	대		
		동소 693 489㎡ [물건번호1:수목[동백,편백,철쭉,배롱나무등],주택목상에태양광시설매각포함.단층주택[목록1]공부상목록2[694번지]에소재하는것이나,현황목록5[693번지]에소재]	전		
2022타경 77881	1	나주시 남평읍 교원리 75 664㎡ 제시외창고등4.3㎡ [공유자김정렬2/9지분전부]	대	59,960,820 59,960,82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지분에한함].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1회제한.일부타인소유건물소재[목록1]
		나주시 남평읍 원촌길 25-1 단층80.19㎡ 부속건물 단층부속사2.34㎡ 제시외창고등13㎡ [공유자김정렬2/9지분전부]	단독주택		
		나주시 남평읍 원촌길 25-1 [주1] 단층82.53㎡ 부속건물 단층부속사13㎡ [공유자김정렬2/9지분전부] [공부상부속건물면적13㎡이나현황6.8㎡]	단독주택		
2023타경 63377	1	나주시 노안면 금안한옥길42단층99.68㎡부속건물단층창고4.68㎡제시외주택등12.3㎡	단독주택	331,695,200 331,695,200	일괄매각
		나주시 노안면 금안리 656 566.4㎡ [물건번호1:제시외건물포함지상의관정,조경수[소나무,동백나무,철쭉,단풍나무등]및조경석매각포함]	대		
[아파트]					
2022타경 70606	1	광산구 비아로185, 105동 2층 202호 [비아동,하남지구호반아파트] 37.83㎡	아파트	73,000,000 73,000,000	2023타경62541 [중복]
2023타경 1294	1	남구 서문대로678번길18,103동14층1402호 [진월동,브라운스톤진월] 84.9624㎡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의하면관리비가2,440,000원미납된것으로보임]	아파트	402,000,000 402,000,000	
2023타경 2068	1	서구 금화로59번길12, 201동 6층 602호 [금호동,금호동진흥더루벤스] 136.235㎡	아파트	807,000,000 807,000,000	
2023타경 2280	1	나주시 예향로3793, 8층 804호 [이창동,나주사랑가] 48.7534㎡	아파트	66,000,000 66,000,000	
	2	나주시 예향로3793, 15층 1507호 [이창동,나주사랑가] 48.7534㎡	아파트	67,000,000 67,000,000	
2023타경 62138	1	광산구 평동로1100번길71, 204동 7층 702호[도산동,송정우방아이유쉘아파트] 80.1990㎡	아파트	392,000,000 392,000,000	2023타경2891 [중복]
2023타경 62794	1	북구 우치로337-4, 6층 601호 [삼각동,드림네스트삼각1차] 84.98㎡	아파트	250,000,000 250,000,000	
2023타경 63247	1	남구 회재로1201, 201동 8층 809호 [주월동,해태2차아파트] 72.72㎡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의하면관리비가338,430원미납된것으로보임]	아파트	188,000,000 188,000,000	
2023타경 64929	1	북구 동운로141, 103동 12층 1203호 [동림동,삼라마이다스] 84.981㎡	아파트	234,000,000 234,000,000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23타경 65137	1	광산구 상완길270, 102동 1층,2층,3층 103호 [수완동,윤슬의아침3차] 84.95㎡	연립주택	594,000,000 594,000,000	
[대지/임야/전답]					
2022타경 62001	1	영광군 법성면 신장리 248 2374㎡ [한광문7/28지분전부.공유자우선매수권1회제한]	전	7,834,200 7,834,200	지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3타경 61623	1	영광군 홍농읍 상하리 436 238㎡	대	20,872,600 20,872,600	
2023타경 62923	1	담양군 봉산면 대추리 295 770㎡ [토지만매각,매각제외제시외건물있음]	대	193,270,000 193,270,000	수목[감나무및소나무등]매각포함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22타경 78198	1	나주시 상아4길22, 1층 147호 [빛가람동,스퀘어가든] 50.40㎡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의하면관리비가5,279,000원미납된것으로보임]	상가	304,000,000 304,000,000	호수별칸막이등이철거되었으나,벽체등의원상회복은가능
[자동차,중기]					
2023타경 1706	1	사용본거지:서울 강남구 언주로75길 28-1 203호 [역삼동] 등록번호:67나4966 차명:A7 50 TDI quattro 연식:2016 [제3자양애리에게보관]	자동차	26,000,000 26,000,000	보관:광주광산구동곡로430[월전동]평동주차장
2023타경 61081	1	사용본거지:광주 서구 상무대로 882 411호 [쌍촌동,에드가리움 1차] 등록번호:131더4110 차명:레인지로버 벨라 D300 연식:2018 [보험사고이력있음.제3자김인호에게보관[062-953-8424]]	자동차	47,000,000 47,000,000	보관:광산구여대길224-1현대주차장
2023타경 67072	1	사용본거지:나주시 다도면 다도로 67-121 평 등록번호:전남06라4204 기종:덤프트럭 연식:2011 [제3자양애리에게보관]	중기	8,000,000 8,000,000	보관:광주광산구동곡로430[월전동]평동주차장
	2	사용본거지:나주시 다도면 다도로 67-121 등록번호:전남06라3575 기종:덤프트럭 연식:2008	중기	6,000,000 6,000,000	
[기타]					
2022타경 71630	1	광산구 송정동 441-40 1001㎡ [공유자김순기495/6525지분전부]	도로	28,846,100 28,846,100	일괄매각.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1회제한
		동소 441-41 65㎡ [공유자김순기495/6525지분전부]	도로		
		동소 441-42 14㎡ [공유자김순기495/6525지분전부]	도로		
		동소 441-43 39㎡ [공유자김순기495/6525지분전부]	도로		
		동소 441-44 3㎡ [공유자김순기495/6525지분전부]	도로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3. 7. 12. [수]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3. 7. 19. [수]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비치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 [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3. 6. 28.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공정배